

인권정보자료실  
CPk1.32

고용관련신문기사 표  
1991 ~ 95년

CLEAR FILE

인권정보자료실  
CPk1.32

grammail 40

NO F103

CLEAR FILE

## 고문 관련 신문 기사 III (91-95)

- 1) 횡설수설 (1991.1.31)
- 2-1) 사노맹-자민통 구속자, 안기부 고문 허위자백
- 2-2) "안기부 고문" 자민통 구속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1991.1.16)
- 2-3) 안기부 구타흔적 확인 - 자민통사건, 구속자 피명 등 검진 (1991.1.16)
- 3-1) 검찰, 건설부 국장 구타의혹 (동아, 1991.2.13)
- 3-2) 건설부국장 검찰서 구타의혹 - 수사조사후 출혈증세 한때 입원 (조선, 1991.2.13)
- 4-1) '고문' 전 보안사장교 보석 - 서울형사지법 "충분한 심리위해 시간 필요" (1991.2.23)
- 4-2) 물고문 세관원 2명 5년 구형 (1991.3.6)
- 5-1) 안기부서 고문, 박노해씨 부인 주장 (1991.3.9)
- 5-2) 고문 세관원 2명, 징역 1년씩 선고 (1991.4.9)
- 6-1) 화곡동주택가 연쇄방화 용의자 "경찰고문 허위자백" 주장 (1991.4.14)
- 6-2) 화곡동 연쇄방화 30대 용의자 "경찰이 물고문" 주장 말썬 (1991.4.14)
- 7-1) 방화용의자 고문의혹, 경관 5명 조사 (1991.4.15)
- 7-2) 석연찮은 방화범 자백
- 7-3) 연쇄방화 용의자 "경찰물고문" 주장 (1991.4.14)
- 8) 밀실구타잠안재우기 갈수록 교묘 - '수사중' 구실로 면회거부... 증거인멸 시간벌기 (1991.5.15)
- 9) "조사과정 가혹행위" 안기부수사관 고발 (1991.6.7)
- 10-1) 검찰고문 자백무죄 - 소매치기혐의 2명 원심개고 석방 (1991.7.31)
- 10-2) 검찰 '고문수사' 인정, 원심개고 무죄선고 (1991.7.31)
- 11) 검찰 가혹수사 인정 무죄선고 - 소매치기 혐의 2명 원심파기 (1991.7.31)
- 12) 고문하는 검찰 (1991.8.1)
- 13-1) '분단아픔' 끝내 자식마저 앗아가 - '남민전' 연루 9년 옥살이 황금수씨 삶 (1991.8.28)
- 13-2) 경관 58% "피의자 고문 불가피" (1991.8.30)
- 13-3) 수사관 가혹행위엔 관용 - 126명 고소·고발에 구속 한명도 없어 (1991.9.18)
- 14-1) 미결수 가혹행위 말썬 - 정주경찰서 소란피운다고 창살묶어 (1991.10.27)
- 14-2) 수감자 5일째 쇠창살 매달아 - 처우개선 요구에, 점심 굶긴채 매일 9시간씩 (1991.10.27)
- 15) "쌀값 보장" 벽서 실랑이끝 구속, 대용감방 형편없는 처우도 문제 (1991.10.29)
- 16-1) 농민운동가 가혹행위 파문 번져 - 민주당 조사단 구성... 재야선 책임자 처벌 요구 (1991.10.29)
- 16-2) 농민운동가 가혹행위, 경찰관 2명 직위해제 (1991.10.30)
- 17-1) 미결수 가혹행위, 경관들 직위해제 (1991.10.30)
- 17-2) 정주경찰서장 서면경고 (1991.10.31)
- 17-3) 폭력감방 농민운동가 보석 (1991.11.3)
- 18)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 (1991.11.7)
- 19-1) 검찰쪽 참고인 연행 가혹행위, 경찰이 진술번복 강요 (1991.12.17)
- 19-2) 검찰측 증인연행 가혹행위 "경찰이 허위자백 강요" (1991.12.16)
- 19-3) 진술번복 강요 경관5명 소환 (1991.12.17)
- 20) 이근안 공소시효 최소 95년 - 애초 알려진 92년 9월 아니다, 공범 재판기간 산정 제외따라 (1991.12.24)
- 21-1) 애꿎은 시민 물고문 - 경찰, 용의자로 연행 범행자백 강요 (1992.5.17)
- 21-2) 행인 물고문 경관 진단서발급 방해 (동아, 1992.5.18)
- 21-3) 고문경관 불구속처리 - 3명이상 가담도 단독범행 축소 (1992.5.22)
- 22-1) 부인살해 자백 강요, 경찰이 남편 물고문 (1992.5.22)
- 22-2) 피살주부 남편 용의자몰아, 자백강요 물고문 (1992.5.22)
- 23-1) '물고문' 경관5명 형사처벌키로 - 경기도경 자체조사, 가혹행위 확인... 오늘 2명 영장신청 (1992.5.23)
- 23-2) 물고문 경관 2명 구속 (1992.5.24)
- 23-3) 주부 번사 가혹행위 경관들 영장 (1992.5.23)
- 24-1) 살인혐의 무죄확정 20대 경관고문 손해배상 소송 (1992.5.28)
- 24-2) '한국고문희생자 원호회' 결성 (1992.6.4)
- 25-1) 검찰이 6시간 물고문 (국민, 1992.7.27)
- 25-2) 고문사실 추정만 돼도, 자백증거 인정 안된다 (동아, 1992.8.15)



- 26) 철야신문은 명백한 고문 - 잠안재워 얻은 자백 증거로 인정말아야, 긴급구속장-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이견 (1992.8.15.)
- 27) 경찰, 참고인에 전자봉 고문 (1992.9.5)
- 28) 안기부서 참고인 가혹행위 (1992.9.8)
- 29-1) 검찰 인신구속 남용 여전 - 고문 등 가혹행위 고발엔 냉담 (1992.10.20)
- 29-2) 고문인정 무죄선고 - 유홍가 이권 썬 살인 폭력배 (1992.12.20)
- 30) 고문으로 간첩죄 조작, 무기수 이장형씨 석방 서명운동 (1993.2.16)
- 31-1) 검찰, 안기부 탈법사건 목살 - 홍성담·박득준씨 가혹행위 등 모두 10여건, 증거보전 돼있어도 처리 수년동안 미뤄 (한겨레, 1993.4.6)
- 31-2) 고문방지 유엔협약 가입추진 (1993.5.3)
- 31-3) 고문방지 유엔협약 가입 방침 (1993.5.3)
- 32-1) 고문방지협약 연내가입 추진 (1993.6.16)
- 32-2) 고문방지협약가입 - 11월말 신청서 제출... 내년 발효 (1993.9.27)
- 33) '불리한 진술'은 무시하는 경찰
- 34) 변명여지없는 인권 무감각증
- 35) 유신 아래 스러져간 남편 원혼 달래주요 - 중경 고문 숨진 고교교사 아내 진상규명 탄원 (1993.9.16)
- 36) '고문근절'로 인권보호 새시대를 (1993.9.20)
- 37)
- 38) '고문피해' 잇단 소송준비 - 5·6공 피해자들 정신질환·자살 등 후유증 심각, 신원권 인정계기 손해배상 청구나서 (1993.9.20)
- 39-1) 검사가 구타등 가혹행위, 피해자에 3천만원 배상 (1993.9.24)
- 39-2) 검찰고문 허위자백 국가배상해야 - 불법감금피해 김학동씨에게 3천만원 지급 (1993.9.25)
- 40) 보석상 여중업원 2명, 밀수혐의 강압수사 (1993.10.3)
- 41) 5공연행 충격 정신이상 여대생 가족 탄원 - 살아남은게 죽은 것만 못합니다 (한겨레, 1993.10.15)
- 42-1) 경찰 안기 24곳 운영 - 위장간판 걸고 밀실수사 등에 사용 (한겨레, 1993.10.15)
- 42-2) 북한 고문·처형 30년간 수천명 (한겨레, 1993.10.15)
- 43-1) 안기부서 고문·성추행 수사관 전원 검찰고발 (1993.10.21)
- 43-2) 간첩혐의 불법연행 안기부서 가혹행위 (1993.10.21)
- 44-1) 검·경 고문 등 가혹행위 피해 국가상대 잇단 손해소 (2003.11.9)
- 44-2) 강희철씨 고문 간첩조작, 제주 재야단체 석방요구 (1993.11.9)
- 45) 정신병 '환경치료' 자리잡는다 - 쇠창살 대신 방탄유리... 자율 부과, 보훈병원 등서 도입... 치료효과 커 (한겨레, 1993.12.21)
- 46-1) 고문보상법 제정청원, 피해자가족 천여명이 (1993.12.29)
- 46) 사상범 고문 괜찮다 - 최형우장관 '말'지 대담 파문, 재야단체 강력반발 사과 요구 (1993.12.29)
- 47) 범인은 경찰서 만들어진다 - 잠안재우기 협박 수법 지능화 (1993.12.29)
- 48) 김시훈씨 10년전 살인누명 고문후유증 '폐인' - 남자구실 못하는 40대 노인으로 (문화, 1994.1.10)
- 49) 살인혐의 2심서 무죄선고 - 증거없고 허위진술 심증 (1994.1.19)
- 50-1) 고문 추방위해 제도 개선을 - 피해자 사례보고회에서 가족들 참혹한 증언 (1994.4.12)
- 50-2)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 51-1) 5·6공 고문피해자 9명 공소시효에 문제제기 (1994.9.4)
- 51-2) 고문방지협약 가입의결 (1994.9.23)
- 52-1) 고문수사관 무더기 고소 - 양심수등 66명... 이근안씨 시효지나 손해소송 내기로 (1994.7.8)
- 52-2) 고문피해자 66명 수사관 집단고소 (1994.7.8)
- 53) 시국사범 고문수사관 고소 의미 - 과거관행 물어두면 내일에도 계속될 것 (1994.7.8)
- 54) 고문에 공소시효 적용되나 (조선법률신문, 1995.1.25)
- 55-1) 삼청교육 피해자들 전두환씨등 4명 재고소 (1995.2.10)
- 55-2) 증인신문 자유진술로 바뀌 (1995.2.10)
- 56) 유괴살해 공방 오늘 결론난다 (1995.2.24)
- 57) 군검찰 가혹수사 말썽 - 하극상 신문·사병 몽둥이질 고소·진정 잇따라 (1995.2.24)
- 58) 고문자백 불인정 82년 첫판결 (동아, 1995.4.11)

- 40) 보석상 여종업원 2명, 밀수혐의 강압수사 (1993.10.3)
- 41) 5공연행 충격 정신이상 여대생 가족 탄원 - 살아남은게 죽은 것만 못합니다 (한겨레, 1993.10.15)
- 42-1) 경찰 안가 24곳 운영 - 위장간판 걸고 밀실수사 등에 사용 (한겨레, 1993.10.15)
- 42-2) 북한 고문·치형 30년간 수천명 (한겨레, 1993.10.15)
- 43-1) 안기부서 고문·성추행 수사관 전원 검찰고발 (1993.10.21)
- 43-2) 간첩혐의 불법연행 안기부서 가혹행위 (1993.10.21)
- 44-1) 검-경 고문 등 가혹행위 피해 국가상대 잇단 손해소 (2003.11.9)
- 44-2) 강희철씨 고문 간첩조작, 제주 재야단체 석방요구 (1993.11.9)
- 45) 정신병 '환경치료' 자리잡는다 - 쇠창살 대신 방탄유리... 자율 부과, 보훈병원 등서 도입... 치료효과 커 (한겨레, 1993.12.21)
- 46-1) 고문보상법 제정청원, 피해자·가족 천여명이 (1993.12.29)
- 46) 사상범 고문 괜찮다 - 최형우장관 '말'지 대담 파문, 재야단체 강력반발 사과 요구 (1993.12.29)
- 47) 범인은 경찰서 만들어진다 - 잠안채우기 협박 수법 지능화 (1993.12.29)
- 48) 김시훈씨 10년전 살인누명 고문후유증 '폐인' - 남자구실 못하는 40대 노인으로 (문화, 1994.1.10)
- 49) 살인혐의 2심서 무죄선고 - 증거없고 허위진술 심증 (1994.1.19)
- 50-1) 고문 추방위해 제도 개선을 - 피해자 사례보고회서 가족들 참혹한 증언 (1994.4.12)
- 50-2)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 51-1) 5·6공 고문피해자 9명 공소시효에 문제제기 (1994.9.4)
- 51-2) 고문방지협약 가입의결 (1994.9.23)
- 52-1) 고문수사관 무더기 고소 - 양심수등 66명... 이근안씨 시효지나 손해소송 내기로 (1994.7.8)
- 52-2) 고문피해자 66명 수사관 집단고소 (1994.7.8)
- 53) 시국사범 고문수사관 고소 의미 - 과거관행 물어두면 내일에도 계속될 것 (1994.7.8)
- 54) 고문에 공소시효 적용되나 (조선법률신문, 1995.1.25)
- 55-1) 삼청교육 피해자들 전두환씨등 4명 재고소 (1995.2.10)
- 55-2) 증인신문 자유진술로 바뀌 (1995.2.10)
- 56) 유괴살해 공방 오늘 결론난다 (1995.2.24)
- 57) 군검찰 가혹수사 말썽 - 하극상 신문·사병 몽둥이질 고소·진정 잇따라 (1995.2.24)
- 58) 고문자백 불인정 82년 첫판결 (동아, 1995.4.11)











# '고문' 전 보안사장교 보석

## 서울형사지법 "충분한 심리위해 시간 필요"

1991. 2. 23

보안사에 근무할 때 피의자를 고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보안사 대위 이성만(46)씨가 항소심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풀려난 사실이 22일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당시 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지난 달 21일 "사건이 복잡해 시간을 두고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제까지 여러차례 공판을 통해 많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사건현장

에 대한 검증까지 했으나 사건의 정황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특히 피해자의 진술도 엇갈리는 등 조사해야 할 사항이 많아 사실심리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해 피고인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은 "사건의 증거관계가 복잡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상급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씨는 지난 83년 3월 해병 0사단 보안부대 대위로 근무하

면서 같은 사단의 정명용(53) 상사를 경기도 김포의 보안부대 지하실로 연행, 횡령 사실을 자백하라면서 1주일간 감금 고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물고문 세관원 2명 5년 구형

특별검사

1991. 3. 06

【부산=이수윤 기자】 5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문세관원 임홍우(52) 양현배(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로 선정된 문제인, 박윤성 특별검사는 이들 2명

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특별검사들은 논고문에서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를 인격체 없는 단순한 수사목적물로 취급하고 피해자의 몸을 구둑발로 짓밟고 물고문까지 한 사실은 피해자의 인격까지 짓밟는 고문행

위로, 인간의 심신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사람을 더이상 사람이 지 않게 하는 고문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백히 밝혀져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86년 4월 27일 부산 중구 중앙동1가 27 수출업체인 세진상사 대표 박명률(38)씨가

부산본부세관에서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세관심리국 직원인 임씨 등 2명으로부터 물고문 등을 당했다며 87년 12월 28일 부산고법에 낸 제정신청이 21개월 만인 89년 9월 27일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의 심리를 거쳐 구형공판이 이루어졌다. 선고공판은 19일 예정

(경남 창원) "합동 작전" 방위사 공문서 19. 8

## 安企部서 고문

안기부(안보기획)가 1991년 2월 23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전 보안사 대위 이성만(46)씨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안기부 측은 "이성만 씨가 고문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문은 안기부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기부 측은 또 "이성만 씨가 고문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문은 안기부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分類: 703 日字: 1991. 4. 9

拷問 세관원 2명 징역 1년씩 선고

【釜山】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문세관원 임홍우(52) 양현배(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로 선정된 문제인, 박윤성 특별검사는 이들 2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연합】아동 방화범의 수배가 시작된 가운데 대전경찰청이 방화범의 수배를 위하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은 "방화범의 수배를 위하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은 "방화범의 수배를 위하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 석연창은 放火犯자백

【대전=연합】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은 14일 방화범 석연창(40)이 방화범으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석연창은 대전지역에서 방화범으로 수배된 뒤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의 수색을 받던 중 자백했다. 석연창은 방화범으로 수배된 뒤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의 수색을 받던 중 자백했다. 석연창은 방화범으로 수배된 뒤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의 수색을 받던 중 자백했다.



日字: 1991. 4. 15 所載: 2

放火容의자 고문의혹  
警署의면 조사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은 14일 방화범 석연창(40)이 방화범으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석연창은 대전지역에서 방화범으로 수배된 뒤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의 수색을 받던 중 자백했다. 석연창은 방화범으로 수배된 뒤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의 수색을 받던 중 자백했다.

부불을 상처회의

## 연쇄放火 용의자 "경찰물고문, 주장"

1991. 4. 14

【대전=연합】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은 14일 방화범 석연창(40)이 방화범으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석연창은 대전지역에서 방화범으로 수배된 뒤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의 수색을 받던 중 자백했다. 석연창은 방화범으로 수배된 뒤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의 수색을 받던 중 자백했다.

## 禾谷洞주택가 연쇄放火 용의자

### "경찰고문 허위자백" 주장

【대전=연합】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은 14일 방화범 석연창(40)이 방화범으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석연창은 대전지역에서 방화범으로 수배된 뒤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의 수색을 받던 중 자백했다. 석연창은 방화범으로 수배된 뒤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의 수색을 받던 중 자백했다.

## 학부동 연쇄放火 30대 용의자 "경찰이 물拷問" 주장 말성

【대전=연합】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은 14일 방화범 석연창(40)이 방화범으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석연창은 대전지역에서 방화범으로 수배된 뒤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의 수색을 받던 중 자백했다. 석연창은 방화범으로 수배된 뒤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의 수색을 받던 중 자백했다.



# 고문실태

제6공화국은 5공시대 슬하계 지행했던 인권유린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철저히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범했다. 이는 일제 이후 끊임없이 반복 확산돼온 고문이라는 공권력의 불법 폭력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했다.

독재정치체제의 통제수단으로 자행돼온 고문은 육체적 고문뿐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인류의 죄'로 추방의 대상이 돼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6공 출범 이후에도 수사기관 주변에서는 고문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가혹행위란 해묵은 '망령'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발된 고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고문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정부의 가시적 노력도 기대했던 것에 못미치게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범죄전쟁' 이후 더 기승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0월19일 밤,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계 보호실에는 폭행 혐의 피의자 동병진(20·마포구 망원2동)씨가 경찰의

사실을 부인하자 수사관들이 바닥에 꿰어 앉힌 채 머리와 팔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할 수 없이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어느 수사기관보다 고문 문제가 심각한 곳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이다. 올해 들어서만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선진대중조직' '자민통' 등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의 고문 폭로가 잇따라 여론을 들끓게 했다. 안기부의 이런 고문은 '밀실수사'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안기부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자행한 고문은 △은몸을 주먹과 구두발, 침대 각목 등으로 마구 구타하는 것부터 시작해 △3일 이상씩 조공도 잠 안 재우기 △야전 삼자투를 무릎 사이에 끼운 채 올라 앉기 △순가락 사이에 젓가락-볼펜 등을 끼우고 누르기 △은몸을 발가벗겨 구타하거나 성적 모욕을 주기 등 실로 다양한다.

5공 시대 악명을 떨쳤던 칠성판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전기고문, '비너꽃기', '몽닭구이' 등 무지막지한 고문 방식 대신 좀더 교활하고 지능적인 고문 방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잠 안 재우기 등은 고문의 흔적이 남지 않아 뒤 탐이 없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고문 방식이다.

사노맹사건 관련으로 현재 서울구치소

# 접견제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옛 보안사)·치안본부 등 수사기관이 시국사건을 수사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변호인이나 가족들의 접견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우리 헌법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돼 있다. 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만 가족·친지의 접견 등을 금지하게 돼있다.

그러나 각종 시국관련 조직사건과 관련, 연행된 사람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단지 수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이나 가족의 접견을 제한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안기부는 변호인과 피의자 가족에 대한 접견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 형사3부 김상원 대법관은 지난 3월28일 서동권 안기부장이 서울형사지법의 변호인 접견 제한처분 취소결정에 불복해 낸 제항고 사건에서 "안기부가 규금

소가 교도소·구규정돼 있으나 인영장의 유치장소'적 수감 절차만에서, 치안본부는 제한한 채 밀실수도 가족에게 보사기관 이통만 5가능 일시·장소를이에 대해 변이라는 이유만으위법일 뿐만 아지적하고 "아직가 진행되는 현수사기관의 가혹감시할 방법이 없

## 법원 허

시국관련 재소로 넘겨진 뒤에5을 받고 있다.

지난해 증반부 따라 터져나오면 관련자들을 한꺼삼씩 만나고 있관계자들은 아예 면회가 금지되기 교도소 안의 차별대우는? 시국사범의 경

# 밀실구타·잠안재우기 갈수록 교

1991. 5. 15

## "수사중" 구실로 면회거부...증거인멸 시간벌

가혹행위를 호소하고 있었다. 공씨의 가슴·무릎·정강이 등에는 여기저기 심한 타박상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수사과정에서의 경찰의 폭력행위를 생생히 증명해주었다. 빛을 받기 위한 청부폭력 혐의로 연행된 공씨는 이 경찰서 지하 무도장과 강력2반 사무실 등에서 2시간여 동안 경찰봉을 양다리 사이에 끼운 채 구두발로 짓밟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이다.

"갑범들은 고문을 하지 않으면 수사가 안된다" "죄질이 나쁜 형사피의자들은 맛아도 싸지 않느냐"는 등의 수사관들의 그릇된 인식이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는 것도 고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 뒤 각 일선 경찰서가 무리한 검거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여성 2명을 특수강도 피의자로 몰아 구타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구속했다가 뒤늦게 피해자 진술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풀어주기도 했다. 또 지난달 13일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 연쇄방화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힌 정아무개(37)씨가 조사과정에서 경찰에 물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나서 물의가 빛어지는 등 경찰의 고문·가혹행위를 둘러싼 잡음은 그치지 않고 있다.

고문은 경찰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 최후의 보루라 일컬어지는 검찰에서조차 이루어지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전 재무부 공무원 이인원(45)씨가 검찰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한 사실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돼 89년 10월27일 무죄로 풀려난 것은 그 대표적 예이다.

이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뇌물수수

에 수감돼 있는 현정택(27·연락국장·성대 3 휴학)씨는 "보통 5명으로 구성된 안기부 수사관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몽둥이로 은몸을 때렸다" "심지어 옷을 모두 벗긴 채 플라스틱자로 성기를 때리는 등 성적 모욕을 주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 자민통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김요섭(24·한림대 전 총학생회장)씨는 가족들을 통해 "조사를 받으며 특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야전 삼자투를 무릎 사이에 끼운 채 올라앉기도 하고 침대 각목으로 심하게 때려 후유증이 남아 진통제를 계속 복용해야 할 정도였다"고 호소했다.

### 고통 못견뎌 자살기도

특히 사노맹, 성당 모집, 관련자로 구속된 강제윤(27·한양대 2 휴학)씨는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견디다 못해 화장실에서 주운 면도칼로 왼쪽 손목 동맥을 끊고 자살하려다 실패하기도 하는 등 6공 출범 이후 '준법수사'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안기부에서 고문은 아직도 '전가의 보도'로 수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고문행위가 폭로될 때마다 언제나 수사기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문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곧바로 현 정권의 고문 근절 의지가 '구두선'에만 그칠 뿐이란 사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고문사실이 폭로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접견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연행된 뒤 한달 이상이 경과해 가족 면회나 변호사 접견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실정이며 고문사실에 대한 '증거 인멸'이 구조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수사중인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보장된 변호인 접견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런 결정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된 박노해(33·본명 박기평)씨의 변호인 유선호 변호사가 박씨에 대한 접견을 안기부가 허용하지 않자 법원에 접견 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내 이뤄졌다.

또 이에 앞서 같은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말 구속된 남진현(29)씨도 구속된 지 15일이 지나서야 안기부 수사관이 동석한 채 약혼녀 조인옥(28)씨를 만날 수 있었다. 조씨는 "남씨가 없어진 지 4일 만에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면회를 신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으며 15일이 지나서 한차례 면회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89년 북한을 방문했던 문의환(73) 목사 등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들에게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이 상당기간 제한됐으며 89년 7월 성남지역노동자민주투쟁연합 의장 연성만(34)씨처럼 법원의 접견 허용 결정이 나온 뒤에도 거부당한 경우도 있다.

접견을 제한하기는 기무사나 치안본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8월 '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동맹'(혁노맹) 사건으로 기무사에 구속된 조재은(24·한국외대 휴학)씨 등은 기무사의 면회 거부로 10일이 훨씬 지난 뒤에야 겨우 가족을 면회할 수 있었다.

조씨는 가족이 여러 차례 면회를 신청했으나 기무사가 계속 거부해 구속 17일 만에 면회를 하게 된 것이다.

기무사는 구속시기에 관계없이 매일 마지막 금요일에 면회를 허용하고 있어 가족들이 면회하기가 더욱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구속장

거나 이에 배달다. 심지어 편지되고 있다고 가시국사범들이 것은 독서와 잠심한 통제를 받이들에게는 쫓편지 쓰는 시간않는다는 것이다

시국관련 재소지난해 8월 서울도서검열 폐지이다. 교도관들5그러나 소내:은 대부분 범죄자의적 판단에편의주의적 발지적을 받고 있재소자와 가성 여부가 가려도소 당국이 지취하는 것은 4철폐하거나 반9할 만한 객관적주장하고 있다.

민주화를 표부 아래서도 사자들의 인권이와 다름이 없다.

정부당국은 7양심수가 하나5에 가입해 인권향상됐다고 강변사건의 경우 수있는 피의자인9보호할 수 있는마련해야 한다는더이상 묵살해서

<김종구 기자>

703 日字: 1991. 6. 7 所載 2

### "조사과정 가혹행위" 安企部수사관 고발

「祖統그룹」피고인 가족 조규룡(총괄)을 수사한 안기부 수사관 4명의 가혹행위를 고발했다. 조씨는 6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 고발했다.

조씨는 이와 함께 차씨가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안기부 수사관의 불법행위 탓에 인권을 침해당한 명

이 들었다며 이 삼척여대 한 중기보전심청도 서울형사지법에 함께 냈다.

조씨는 "고발장에서 수사관 차 씨들이 지난 3월13일 안 기부에 연행돼 이틀 동안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여러 목과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 등을 마구 얻어 맞았다"며 "당시 수사관 6명이 가혹행위를 한 뒤 삼척여대 약을 발판수사관 고문행위를 은밀히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경관 58% "피의자 고문 불가피"**  
 ○...수사를 담  
 당하는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피의  
 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혹행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소·고발인으로  
 부터 사례비를 받거나 청탁을  
 들어줄 수도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  
 이런 사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조병인(38) 연구주임의 전국  
 26개 경찰서 경사급 이하 수사형  
 사 6백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해 밝혀졌  
 다. 1991. 8. 30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홍약법  
 에 대해 어느 정도 고통을 가해  
 도 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57.9  
 %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절  
 대로 안 된다'는 입장은 4.2%에  
 지나지 않았다. 또 '심증이 가는  
 용의자가 순순히 자백하지 않을  
 경우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문  
 항에 대해서도 41.1%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도중 경우에 따라 청탁을  
 들어줄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서는 40%가 찬성한 반면 '절대  
 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  
 %뿐이었으며 특히 고소·고발인  
 이 주는 사례비에 대해서는 절반  
 이 넘는 50.2%가 '받을 수 있다'  
 고 응답했다.

**경관 58% "피의자 고문 불가피"**  
 ○...수사를 담  
 당하는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피의  
 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혹행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소·고발인으로  
 부터 사례비를 받거나 청탁을  
 들어줄 수도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  
 이런 사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조병인(38) 연구주임의 전국  
 26개 경찰서 경사급 이하 수사형  
 사 6백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해 밝혀졌  
 다. 1991. 8. 30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홍약법  
 에 대해 어느 정도 고통을 가해  
 도 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57.9  
 %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절  
 대로 안 된다'는 입장은 4.2%에  
 지나지 않았다. 또 '심증이 가는  
 용의자가 순순히 자백하지 않을  
 경우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문  
 항에 대해서도 41.1%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도중 경우에 따라 청탁을  
 들어줄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서는 40%가 찬성한 반면 '절대  
 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  
 %뿐이었으며 특히 고소·고발인  
 이 주는 사례비에 대해서는 절반  
 이 넘는 50.2%가 '받을 수 있다'  
 고 응답했다.

**수사관 가혹행위엔 "관용"**  
 중앙 1991. 9. 18 500  
 126명 고소·고발에 구속 한명도 없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까지 수사과정에서 수사관  
 으로부터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고소·  
 고발시킨 126명 1백26명  
 이다. 전 직종의 전수조사  
 나 대부분 불기소처분했으  
 며 구속기소는 단 한명도

올들어 8월말까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해까지 가혹행위 등으로  
 고소·고발한 자 1백26명이  
 수사기관에서 1백26명이  
 한 수사가 풀렸으며 나머  
 지 25명만 현재 수사중인  
 다.

이중 수사가 풀렸던 1  
 백1명 가운데 96%인 97명  
 이 불기소처분(무혐의) 74  
 명·기소후에 23명(혐의)  
 명만이 불기소됐으며 1  
 명만이 불기소됐으며 1  
 명만이 기소중이었다.

ATOM TATIONERY CO



# 수감자 5일째 쇠창살 매달아

처우개선 요구에 **점심 굶긴채 매일 9시간씩**  
1991. 10. 27

## 정주경찰서

【정주=장세환 기자】 전북 정주경찰서가 대용감방에 수감돼 있는 형사피의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자 이들에게 수감을 채워 매달아 놓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주경찰서는 쌀값 제값받기 운동을 하다 구속된 허윤하(30·부안군농민회 경제협동사업부장) 씨와 동료 수감자 2명이 지난 22일 오전 대용감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자 이날 오후부터 26일까지 닷새째 허씨 등 2명의 손목에 수감을 채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동안 점심을 굶긴 채 쇠창살에 매달아 놓는 등 격리수용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 25일 면회간 부안 민주운동연합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으며 이 관계자는 허씨 등이 가혹행위를 받고 있는 모습을 사진찍어 26일 공개했다.

경찰의 가혹행위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 민가협과 인권선교협의회, 부안·정읍군농민회, 전교조 부안·정읍군지회 회원 등 70여명이 "교도소 징벌방에서조차 이런 가혹행위가 가해진 적이 없다"며 경찰의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고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정주경찰서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정주경찰서 관계자는 "허씨 등이 감방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선동해 15일의 금지명령을 내렸다"며 "쇠창살에 매달아 놓는 등 격리수용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 미결수기회행위말서

10. 27 **井州경찰서 소란피운다**고 **창살뚫어**

1991. 10. 27  
【정주=장세환 기자】 전북 정주경찰서가 대용감방에 수감돼 있는 형사피의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자 이들에게 수감을 채워 매달아 놓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주경찰서 대용감방에 수감돼 있는 허윤하(30·부안군농민회 경제협동사업부장) 씨와 동료 수감자 2명이 지난 22일 오전 대용감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자 이날 오후부터 26일까지 닷새째 허씨 등 2명의 손목에 수감을 채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동안 점심을 굶긴 채 쇠창살에 매달아 놓는 등 격리수용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 농민운동 수감자 가혹행위 충격

전북 정주경찰서 대용감방에 수감돼 있던 농민운동가 허윤하(30·부안군 농민회 경제협동사업부장) 씨가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와 함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부안군 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28일 "허씨에 대한 고문은 농민운동의 예봉을 꺾기 위한 공작으로서 이미 구속될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윤하 등 4가지의 무더기 혐의로 구속돼 7일 정주경찰서 대용감방에 수감됐다.

허씨가 수감돼 있는 대용감방은 교도소를 대신하는 곳으로

징벌을 내린 것은 지나쳤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농민회 박현종(32) 사무국장은 "지난 8월부터 농민회 간부들이 30여개 마을을 돌며 쌀값관련 벽서를 쓰고 벽량으로 내몰린 농촌 실태의 심각성을 교육하는 등 담쌓린 만



농민운동가 허윤하(사진 왼쪽) 씨 등에 대한 가혹행위가 시신을 통해 생생히 폭로되자, 경찰의 인권 탄압에 대한 비난이 빚어지고 있다. <부안 민주운동연합 제공>

## "쌀값 보장" 벽서 실랑이끝 구속 대용감방 형편없는 처우도 문제

고 다니는 보안면사무소 직원 유재승(32) 씨와 우연히 맞닥뜨리자 "왜 지우느냐"며 항의하던 끝에 가벼운 승강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씨가 "김일성 사상에 이렇게 하라고 나왔느냐"고 말하자 발끈한 허씨가 "농민 좀 제대로 살게 하자는 데 김일성이 왜 나오느냐"며 지시에 가서 이 말의 저의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안지서는 유씨를 데려온 허씨의 항의를 묵살한 채 허씨만 부안경찰서로 넘겼으며, 허씨는 공무집행방해, 광고물단속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오토바이 무면

면허시간이 경찰의 편의에 따라 제한되고(오전 10~12시, 오후 2~4시), 신문구독을 금지하는가 하면, 부식과 담요 등 침구가 법정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등 교도소에 비해 처우가 형편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는 동료 수감자들과 협의한 끝에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가 징벌방에 따로 갇혀 가혹행위까지 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대용감방 수감자 1명의 하루 식비와 연료비가 1천4백72원 밖에 안돼 처우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자해행위 염려가 없는 농민운동가에 그런

급 대가를 받아보자는 농민운동을 펼침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정권의 하수인들이 농민회를 위축시키기 위해 저지른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박 국장은 "그러나 농민회는 굽히지 않고 오는 11월4일 '쌀수입 반대·쌀값 제값받기·전량수매 생취를 위한 부안군 농민대회'를 열고, 이어 면별로 같은 대회를 열어 농민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승만정권 이후 계속돼온 '살농정책'을 이제라도 '활농정책'으로 바꾸지 않는 한 농민들의 희생과 이에 따른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장세환 기자>



# 농민운동가 가혹행위 파문 번져

1991. 10. 29  
 500  
**민주당 조사단 구성... 재야선 책임자 처벌 요구**

전북 정주경찰서 대용감방의 가혹행위 사실이 밝혀지자 민주당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재야단체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북 정주 농민운동가 허윤하(30)씨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사건 대책을 논의한 끝에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을 벌이는 농민운동가를 구속해 쇠창살에 매다는 가혹행위까지 가한 것은 농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사단을 보내 진상이 확인되는 대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허경만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최낙도·권노갑·홍기훈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사건은 대용감방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재소자들의 대한 가혹행위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6공화국의 인권 상황이 5

공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사례"라면서 △정주경찰서장 파면 △경찰청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범죄와의 전쟁을 부르짖고 있는 경찰이 경찰서 안에서 농민운동가

를 철창에 매다는 비인간적인 고문을 한 사실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허윤하씨 등을 고문한 경찰관들을 즉각 파면·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북 농민운동연합과 농민회 전북도연맹, 인권선교협

의회, 민가협 등 전북도내 7개 재야단체로 구성된 '정주경찰서 고문만행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창신 신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반인간적 고문만행 책임자 처벌, △내무부장관 사과 △모든 양심수에 대한 고문 중지 등 5개항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대용감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점심도 굶긴 채 두 손에 수갑을 채워 철창에 높이 매달아 놓은 것은 이 정권이 인권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며 "이 문제는 노 정권 아래서 일상화된 고문만행의 한 사례가 분명한 만큼 정권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농민회 전북도연맹과 부안민협 관계자를 서울로 보내 허윤하씨의 고문사실을 널리 알리고 전 농, 전민련, 민변, 민주당 등과 연대투쟁 방법을 찾기로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전북도지부도 진상조사에 나섰다.

## 농민운동가 가혹행위 1991. 10. 30 경찰관 2명 직위해제

1991. 10. 31  
 500  
**민주당 경위 현장조사**

[정주=장세환 기자]속보 =전북 정주경찰서 대용감방 가혹행위와 관련, 민주당진상조사단(단장 허경만 최고위원)은 29일 정주경찰서에서 가혹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대용감방의 실태 등을 살폈다. 조사단은 가혹행위를 당한 농민운동가 허윤하(30)씨와 김유신(24)씨를 경찰서장실로 불러 처우개선을 요구하게 된 경위, 매달려 있을 때의 고통 정도 등을

살고 박문석 서장을 상대로 수감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규정을 벗어난 금지상태 등을 조사한 뒤 대용감방을 둘러 보았다. 이 자리에서 허씨는 대용감방 수감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조했다며 조사단은 "타성적 인권경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정주경찰서 수사과장 김명중 경감과 수사계장 조상근 경위 등 2명을 직위해제했다.

**미결수 가혹행위  
 1991. 10. 29  
 500  
 警官들 직위해제**  
 [정주=장세환 기자]속보 =전북 정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농민운동가 허윤하(30)씨와 김유신(24)씨를 경찰서장실로 불러 처우개선을 요구하게 된 경위, 매달려 있을 때의 고통 정도 등을 살피고 박문석 서장을 상대로 수감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규정을 벗어난 금지상태 등을 조사한 뒤 대용감방을 둘러 보았다. 이 자리에서 허씨는 대용감방 수감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조했다며 조사단은 "타성적 인권경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정주경찰서 수사과장 김명중 경감과 수사계장 조상근 경위 등 2명을 직위해제했다.

### 정주경찰서장 서면경고

[정주=장세환 기자]속보 =전북 경찰청은 30일 정주경찰서 대용감방 가혹행위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정주경찰서장 박문석총경을 서면경고 조치했다.

한편 정주시·부안군농민회, 전교조 등 재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정주경찰서 고문만행 대책위'(부안위원장 박병준 신부 정주 김철동 등)는 29일 정주경찰서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농민운동가 허윤하(30)씨와 김유신(24)씨를 경찰서장실로 불러 처우개선을 요구하게 된 경위, 매달려 있을 때의 고통 정도 등을 살피고 박문석 서장을 상대로 수감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규정을 벗어난 금지상태 등을 조사한 뒤 대용감방을 둘러 보았다. 이 자리에서 허씨는 대용감방 수감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조했다며 조사단은 "타성적 인권경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정주경찰서 수사과장 김명중 경감과 수사계장 조상근 경위 등 2명을 직위해제했다.

### 폭력감방 농민운동가 보석

[정주]속보 =전북 정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농민운동가 허윤하(30)씨와 김유신(24)씨를 경찰서장실로 불러 처우개선을 요구하게 된 경위, 매달려 있을 때의 고통 정도 등을 살피고 박문석 서장을 상대로 수감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규정을 벗어난 금지상태 등을 조사한 뒤 대용감방을 둘러 보았다. 이 자리에서 허씨는 대용감방 수감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조했다며 조사단은 "타성적 인권경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정주경찰서 수사과장 김명중 경감과 수사계장 조상근 경위 등 2명을 직위해제했다.



# 검찰쪽 참고인 연행 가혹행위 경찰이 진술번복 강요

서울지검 특수3부 권영석 검사  
는 16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지  
난 9월 구속된 민주당 중앙위원  
이창열(59)씨 사건의 참고인이었  
던 조남근(38·인삼재배업)씨가  
서울경찰청 특수강력수사대에 연  
행돼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을  
것을 강요당하며 가혹행위를 받  
았다는 진정을 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조씨는 검찰에 낸 진정서를 통  
해 "지난달 26일 집앞에서 4~5  
명의 경찰수사관에 의해 특수강  
력수사대 조사실로 강제연행돼 3  
0여시간 동물이 구타와 이른바 '통  
닭구이' 고문을 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로부터  
검찰에서 한 진술이 거짓이고 이  
창열씨 수사를 한 서울지검 관계  
자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특수강

력수사대 관련자들을 불러 진상  
규명·처리의 수사를 벌였다. 그  
리나 경찰은 "도장과 지문을 위  
조한 전문가를 수사하면서  
조씨를 24시간 조사한 바는 있  
으나 고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  
다.

1991. 12. 17  
한편 이창열씨는 지난 9월 "구  
속된 사람을 법원에 부탁해 석방  
시켜 주겠다"며 1억3백만원의 받  
은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2부에  
연행돼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조씨가 "이씨에게 돈을 건넸다"  
는 진술을 해 구속됐다.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해마다 발  
간하는 국제인권보고서는 시국관련, 재소  
자의 수와 그들이 받는 처우로써 각국의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시국관련 재소  
자의 수와 그들이 받는 처우야말로 그 나  
라의 인권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가 되기 때문이다.

6공화국 들어 시국 재소자의 수가 급증  
하자 이들에 대한 집단폭행 등 가혹행위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겉으로 민주  
화를 내세우고 있는 6공화국의 인권상황  
이 속으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대한변협이 6일 발표한 '9  
0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90년 11월 현  
재 시국관련 구속자는 모두 1천8백72명으  
로 88년의 7백79명, 89년의 1천3백1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며칠  
전 보도된 정주경찰서의 농민운동 재소자  
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은 가혹행위 장면  
의 사진까지 생  
생하게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었  
다. 농민이 쌀  
제값받기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것만도 억울하고 분통터질  
일인데, 5일 동안 짐승을 굶긴 채 매일 9  
시간씩이나 수갑을 채워 쇠창살에 매달아  
두더니... 더구나 쌀 수매값과 수매량 때  
문에 전국의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터  
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점을 안고 있다. 그러한 구조적 문제점들  
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  
발을 막을 수 없으며, 재소자의 인권보장  
이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 우연아닌 구조적인 문제

첫째, 미결구금자의 처우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형사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판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유죄의 판결이 확  
정되지 아니한 미결구금자는 무죄로 추정  
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비록 구속되어 있  
다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만 제한될 뿐 그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 미결구금자들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미리부터 범죄자로  
취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형법은 위헌적인 법률  
일 뿐 아니라 근대적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악법이므로 개정이 시급하다.

둘째, 대용감방의 문제이다. 현재 전국  
적으로 미결구금자를 수용하는 구치소가  
턱없이 부족하여 웬만한 중소도시와 지방  
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을 대용감방으로 이  
용하고 있다. 심지어 인구가 70만명에 이  
르고 인근의 언양과 양산을 합치면 80만  
명이 훨씬 넘는 울산과 같은 대도시조차  
구치소가 없어 미결구금자를 각 경찰서  
유치장에 나누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경찰서 유치장이란 문자 그대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결구  
금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개월씩 장  
기간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  
고 있다. 이 때  
문에 미비한 시  
설로 인하여 미  
결구금자의 처우  
는 열악해질 수  
밖에 없고, 더구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가  
득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터에 본연의 임  
무가 아닌 귀찮은 잡무를 떠맡는 셈이므  
로 미결구금자 처우에 소홀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열악한 처우와 각종 비리, 심  
지어 경찰의 가혹행위까지 마구 자행되어  
대용감방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  
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  
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처우와 인권상황에 모두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



문재인

### 가혹행위 사진 충격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발뒤꿈치가 쳐  
들린 채 쇠창살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농민운동가 허윤하씨의 사진은 이  
땅 농민들의 지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 땅의 인권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 근래 출간한 사상범 장기수  
들을 통하여 지난날 그들이 교도소 안에  
서 전향을 강요당하면서 오랫동안 겪었던  
무지막지한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의  
체험담을 들으면 누구나 참담한 부끄러움  
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이런 일을 외면하  
면서 인권이니 민주화니 환소리만 늘어놓  
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도록 내버  
려둘 것인가?  
정주경찰서 사건은 결코 우발적이라고  
할 수 없는, 두가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이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집권  
서신이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물론 원하  
는 대로 신문을 보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어야  
하고, 재판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가족과 재판대척을 협의하고 유리한 변론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등의 방어 준  
비행위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행형법은 미결구금  
자에 대한 별도의 처우규정을 두지 않고  
수형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결구금자는 노역을 하  
지 않는 점만 다를 뿐 수형자와 거의 다  
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며, 수형자와 거의

### 법률·제도개선 시급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  
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과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  
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쪽 선  
수를 묶어 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  
찬가지이다. 미결구금자들이 헌법과 형사  
소송법의 정신에 걸맞게 대접받을 수 있  
도록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  
하다. <변호사>

1991. 12. 16  
500  
김찰추 證人연행 가혹행위  
경찰이 허위사백강요

김찰추(59·인삼재배업)씨가 서울지검 특수3부 권영석 검사에 의해 구속된 후, 서울경찰청 특수강력수사대에 연행돼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을 것을 강요당하며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진정을 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는 진정서를 통해 "지난달 26일 집앞에서 4~5명의 경찰수사관에 의해 특수강력수사대 조사실로 강제연행돼 30여시간 동물이 구타와 이른바 '통닭구이' 고문을 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로부터 검찰에서 한 진술이 거짓이고 이창열씨 수사를 한 서울지검 관계자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특수강력수사대 관련자들을 불러 진상규명·처리의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도장과 지문을 위조한 전문가를 수사하면서 조씨를 24시간 조사한 바는 있으나 고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열씨는 지난 9월 "구속된 사람을 법원에 부탁해 석방시켜 주겠다"며 1억3백만원의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2부에 연행돼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조씨가 "이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해 구속됐다.

김찰추(59·인삼재배업)씨 서울지검 특수3부 권영석 검사에 의해 구속된 후, 서울경찰청 특수강력수사대에 연행돼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을 것을 강요당하며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진정을 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는 진정서를 통해 "지난달 26일 집앞에서 4~5명의 경찰수사관에 의해 특수강력수사대 조사실로 강제연행돼 30여시간 동물이 구타와 이른바 '통닭구이' 고문을 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로부터 검찰에서 한 진술이 거짓이고 이창열씨 수사를 한 서울지검 관계자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특수강력수사대 관련자들을 불러 진상규명·처리의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도장과 지문을 위조한 전문가를 수사하면서 조씨를 24시간 조사한 바는 있으나 고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열씨는 지난 9월 "구속된 사람을 법원에 부탁해 석방시켜 주겠다"며 1억3백만원의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2부에 연행돼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조씨가 "이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해 구속됐다.

### 진술번복 강요 경찰 5명 소환

가혹행위 부인  
경찰의 진술이 허위사백이라는 진정서를 낸 김찰추(59·인삼재배업)씨가 서울지검 특수3부 권영석 검사에 의해 구속된 후, 서울경찰청 특수강력수사대에 연행돼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을 것을 강요당하며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진정을 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는 진정서를 통해 "지난달 26일 집앞에서 4~5명의 경찰수사관에 의해 특수강력수사대 조사실로 강제연행돼 30여시간 동물이 구타와 이른바 '통닭구이' 고문을 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로부터 검찰에서 한 진술이 거짓이고 이창열씨 수사를 한 서울지검 관계자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특수강력수사대 관련자들을 불러 진상규명·처리의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도장과 지문을 위조한 전문가를 수사하면서 조씨를 24시간 조사한 바는 있으나 고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열씨는 지난 9월 "구속된 사람을 법원에 부탁해 석방시켜 주겠다"며 1억3백만원의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2부에 연행돼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조씨가 "이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해 구속됐다.







### 婦人 살해 자백 강요 경찰이 남편 물拷問

【하루만에 무혐의 석방】(水原=任真彬)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신촌리 462의 4(가)의 남편 趙某(33·남)을 살해한 혐의로 고소된 한 남자가 경찰의 물拷問을 받던 차에 살해 사실을 드러내 자백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경찰청이 22일 오후 10시경 용인경찰서에서 남(33)을 물拷問하던 중 남이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남은 살해 사실을 자백한 뒤 경찰의 물拷問을 받던 차에 살해 사실을 드러내 자백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이 살해한 사실을 자백한 뒤 경찰의 물拷問을 받던 차에 살해 사실을 드러내 자백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은 살해 사실을 자백한 뒤 경찰의 물拷問을 받던 차에 살해 사실을 드러내 자백한 사실이 드러났다.

東西

### 被殺주부 남편 용의자 몰아 자백 강요 물拷問

【수원=홍종익 기자】 경기도 경찰청은 23일 변사체로 발견된 30대 주부의 남편을 살인 용의자로 몰아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한 용인경찰서 형사계 김성남(38) 경장 등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용인경찰서 형사계 김성남(38) 경장 등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용인경찰서 형사계 김성남(38) 경장 등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 '물고문' 경관 5명 형사처벌키로

1992. 05. 23 경기도경 자체조사 가혹행위 확인... 오늘 2명 영장신청

【용인=배경록 기자】속보=경찰이 변사 가정주부의 남편을 고문 수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한겨레신문) 5월22일과 관련해 경기도 경찰청은 22일 자체감찰 조사에 나서 용인경찰서 형사계 김성남(38) 경장 등 경찰관 5명이 남편 조항기(34)씨를 조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다리 등을 마구 때리고 찌르며 범행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물고문과 가혹행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3일중 김 경장과 장인수(35) 경장 등 2명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서대원(34) 경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상춘 용인경찰서장 등 경찰관부들도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할 방침이다.

### 물고문 경관 2명 구속

【수원=홍종익 기자】속보=경기도 경찰청은 23일 변사체로 발견된 30대 주부의 남편을 살인 용의자로 몰아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한 용인경찰서 형사계 김성남(38) 경장 등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홍종익 기자】속보=경기도 경찰청은 23일 변사체로 발견된 30대 주부의 남편을 살인 용의자로 몰아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한 용인경찰서 형사계 김성남(38) 경장 등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살인혐의 무죄확정 20대**

**경관고문 손해배상 소송**

1992. 8. 28

서울 서부구 오류동 비디오가게 모녀 살해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진현관(21)씨는 27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진씨는 소장에서 "지난 89년 12월 살해용의자로 지목돼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에게 강제연행된 뒤 잠도 못자고 온몸을 구타당한 상태에서 거짓자백했다"면서 "고문으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해 감독책임이 있는 국가에서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진씨는 89년 12월 경찰에서의 자백을 토대로 오류동 소망비디오가게 모녀살해사건 범인으로 구속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국고문희생자 위호회' 결성**

**미국서 인권운동가 참여**

공권력에 의해 고문당한 희생자들에 대한 근절을 위한 국제활동을 담당할 '한국고문희생자위호회'가 미국 땅에서 결성됐다.

한국고문희생자위호회 실행위원 박후권(26·미 버클리대 대학원 경제학)씨는 3일 민주화실천

가속운동협의회(연가협)를 방문해 위호회 결성을 알리고 국내 인권단체의 연대를 요청했다.

박씨에 따르면 위호회는 지난 달 30일 미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1백50여명의 동포·미국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고 '한국의 고문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위호회에는 71년 제일동포 유학생간담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90년 3월1일 석방된 서승(49·버클리대 사회학과 객원교수)씨를 비롯해 리타 메란(국제인권옹호회 상임대표), 에드 베이커(하버드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부소장), 파리스 하비(국제노동인권기금 소장) 등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박씨는 전했다.

**檢察이 6시간물고문**

**釜山 밀수혐의 선원이 주장... 물의**

**자백 못받자, 없었던일로 하자**

【釜山=金聖權기자】의향선원이 장사의 전횡(專橫)을 고발한 뒤 밀수혐의자로 지목돼 6시간 물고문을 당한 선원들이 주장하는 바를 소개한다.

다. 7명 선원들은 또 물고문을 당한 뒤 자백을 하지 않았고, 자백을 했더라도 자백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물고문을 당한 뒤 자백을 했더라도 자백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물고문을 당한 뒤 자백을 했더라도 자백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703 日字: 1992. 8. 15 所載: 동아 而: 2

**“拷問사실「추정」만 돼도 自白증거 인정 안된다”**

서울高法 절도혐의 4명 無罪

수사기관의 고문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고 추

정만 되면 재판은 자백의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李隆維 부장판사)는 14일 시내버스 승객을 상대로 소액치기를 해온다 상습수탈(상습) 구속기소판(申正植 씨)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수사기관의 고문사실이 추정돼 자백의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뒤 항소심 선고공판을 개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나친 물고문으로 구속수행수탈(상습)을 인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항소심은 자백의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뒤 항소심 선고공판을 개시 무죄를 선고했다."



# 警察、참고인에 電子棒拷問

南楊州署 20만원 積 입막음 企圖

1992. 9. 05

경남 피의자 20만 원, 재판관 김근

경남 피의자 20만 원, 재판관 김근

경남 피의자 20만 원, 재판관 김근

경남 피의자 20만 원, 재판관 김근

가장 악랄한 고문 수법인 전자봉을 참고인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의자 김근은 재판관 김근에게 20만 원을 건넸다. 김근은 김근에게 전자봉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근은 김근에게 전자봉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근은 김근에게 전자봉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철야신문이 명백한 구멍

辯協 심포지엄 토론회에서

철야신문은 인간의 기본권인 수면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수사방법으로 철야신문을 보도한 것은 명백한 구멍이다. 철야신문은 인간의 기본권인 수면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수사방법으로 철야신문을 보도한 것은 명백한 구멍이다.

# 잠안재워 억울이 自由 증거로 認定 말아야

## 긴급구속장·令狀실질심사제도 異見

잠안재워 억울이 自由 증거로 認定 말아야

긴급구속장·令狀실질심사제도 異見

잠안재워 억울이 自由 증거로 認定 말아야

긴급구속장·令狀실질심사제도 異見

< 朴元在 >







拷問방지 유엔협약 加入 추진

政府, 9월중 國會에 의안 제출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제정된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제정할 때 유엔 인권위원회의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파견, 조사 등을 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제정된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제정할 때 유엔 인권위원회의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파견, 조사 등을 하고 있다.

拷問방지 유엔協約 가입 방침

비준案 9월 國會 제출

개인이 유엔에 國家 提訴權 인정

1993. 5. 3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제정된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제정할 때 유엔 인권위원회의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파견, 조사 등을 하고 있다.

分類: 番號

1993 2월

日字: 1993. 2. 16

所載: 7

圖: 141

“고문으로 간첩죄 조작”... 무기수 이장형씨 석방 서명운동

한서백



간첩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9년째 복역중인 이장형(61)씨에 대한 석방탄원 운동이 한창이다. 지난 73년부터 고산지서 예비군 중대장을 지낸 이씨는 6·25 때 금성무공훈장을 받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각종 표창을 받은 인물,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씨가 어느날 갑자기 '간첩'으로 둔갑한 것이다. 가톨릭 신자인 이씨는 지난 90년 2월 한 신부에게 보낸 '봉한 속의 기도'라는 편지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고문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됐는지를 폭로했다.

이씨는 이 글에서 “남영동 대공본실에서 발가벗긴 채로 철성관에 묶여 고문을 받는 등 67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면서 “고문 기술자인 수사반장의 얼굴만 기억할 뿐 이름은 몰랐으나 그 뒤 김근태씨 고문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고문경관들의 얼굴사진을 보고서

야 그가 이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밝히고 “아내와 딸을 똑같은 방법으로 고문하겠다는 위협 때문에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지난 8일 최 변호사와의 면회에서 “67일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인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모슬봉 레이다기지 등을 아느냐’고 물어, 안다고 대답하면 그렇게 쓰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내가 밀입북한 것으로 돼있는 82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서 같은 마을 출신이며 고교동창인 좌이무개씨를 만난 적이 있고 사촌여동생의 집에서 묵었다”면서 밀입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씨와 함께 끌려가 대공본실에서 37일 동안 조사를 받았던 이씨의 삼촌 이동우(63·제주시 이도2동)씨도 “수사요원들이 종이를 주면서 대정을 모슬봉에 세워진 레이다기지를 그려보라고 해 그렸더니 조총련계 친척에게 기밀을 탐지해 보고한 것처럼 조서를 꾸몄으나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말해 이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천주교 제주교구사제단은 교구 차원에서 받은 서명을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

새정부 출범 직후 단행될 대사면을 앞두고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이 지난 84년 조총련 관련 간첩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장형(61·제주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씨가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이라며 무죄석방을 탄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또한 최병모 변호사도 재심신청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씨가 치안본부 대공수사요원들에게 연행된 것은 84년 6월 15일, 제주항에서 서울 남영동 대공본실로 끌려가 67일 동안 고문기술자 이근인으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받은 그는 조총련계인 숙부(일본 거주)의 지령을 받아 73년 6월부터 82년 10월까지 20여건의 각종 군사기밀을 탐지해 보고하고 82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복한을 방문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85년 9월 대법원 최종판결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9년째 복역중이다.

이씨는 한국전쟁 때 해병대 장교로 참가해 금성무공훈장을 받았으며 73년말 한경면 고산지역 예비군 중대장이 된 뒤에도 대통령·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 표창 등



分類: 203  
番號:

日字: 1993. 4. 6

所載 頁 數 面: 14

# 검찰, 안기부 탈법사건 묵살

## 홍성담·박득준씨 가혹행위등 모두10여건 증거보전 돼 있어도 처리 수년동안 미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태우 정권 당시 안기부에 의해 이뤄진 가혹행위, 변호인 접견불허 등 불법행위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사건들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안기부에 대한 고소·고발사건들은 대부분이 몇해씩 검찰의 조사와 처리가 미뤄져온데다 내용이 인권문제와 직결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앞으로 검찰권 행사의 방향 및 새 정부 아래서의 안기부 위상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5일 현재 서울지검에 계류돼 있는 안기부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은 △89년 당시 민족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이던 홍성담(38)씨 등 2명이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낸 고소 △91년 조국통일촉진그룹사건 관련자 박득준(28)씨 등이 역시 가혹행위를 이유로 낸 고소 △지난해 9월 전 민주당 공동대표 김낙중(58)씨

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를 이유로 대한변협 인권위가 고발한 사건 등 모두 10여건에 이른다.

이들 사건은 모두 발생 당시 안기부의 탈법적 수사관행과 관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들로 고소·고발 뒤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3년반이 지났으며 검찰인사로 담당검사가 2~6번까지 바뀌도록 처리가 미뤄져왔다.

더구나 홍성담씨와 박득준씨의 경우 안기부 수사 직후 몸에 난 상처가 법원에 증거보전까지 돼 있는 상태임에도 검찰은 "담당수사관을 특정해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왔다.

이밖에도 △사노맹 중앙위원 박기평(35·본명 박노해)씨가 안기부에서 자신이 부인 아닌 다른 여자와 동거했다고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사건 △민주시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정형근 당시 안기부 수사차

장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도 고소인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재야법조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안기부도 개편되기 시작한 만큼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안기부가 올라

른 위상을 찾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 홍성담, 박득준

1993년 4월 6일 (월) 1993. 4. 6. 14:00

1993년 4월 6일 (월) 1993. 4. 6. 14:00



## 투시경

83/6/16

학생들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김춘도 순경의 사망사건으로 경찰은 여론의 적지않은 '동정'을 받고 있다. 경찰이 '피해자가 됐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경찰 전체에 안쓰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수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사건의 진상에 제대로 접근하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이후 계속된 수사에서도 경찰이 애초 발표와 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리한' 진술은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등 '짜맞추기식'으로 진행시킨 점이다.

이번 사건 수사본부장인 서정욱 서울경찰청 형사부장은 "학생들이 10초 남짓 쓰러진 김 순경을 에워쌌다"는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몇 분간의 집단폭행'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은 이미 주검을 충분히 조사한

### '불리한 진술'은 무시하는 경찰

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순경 사망 직후 "학생들이 가방에서 돌을 꺼내 던져 김 순경을 쓰러뜨린 뒤 몇 분 동안 발로 밟고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말았다.

경찰은 이날 늦게까지 이 일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펼쳤으나 경찰 발표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으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말조차 엇갈리는 상태였는데도 무리한 발표를 한 것이다. 이런 첫 발표는 감정이 격앙된데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임을 고려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문 부검의의 소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 순경의 사망직후 사체사진을 제시하며 "집단폭행에 따른 많은 피멍과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심지어 김효은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뒤 하루가 지나도록 사고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설픈 전달의 수사발표만 되풀이했다.

결국 이번 경찰수사는 여론을 부추기는 데만 열중한 나머지 수사의 생명이라 할 엄정성을 잃고 만 것이다. 경찰이 관련된 수사를 과연 앞으로도 경찰에 맡겨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일부의 회의가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중언 기자**

## 국민방위지협약 年内 가입 추진

### 한국무, 세계인민회의 기조전환

【근】 세계인민회의(이하 세계인민회의)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대의원대회에서 한국무(이하 한국무)의 기조를 전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한국무의 기조가 '세계인민회의'에서 '국민방위지협약'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정은 한국무의 기조가 '세계인민회의'에서 '국민방위지협약'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정은 한국무의 기조가 '세계인민회의'에서 '국민방위지협약'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 拷問방지협약 가입

### 11일末 신청서 제출... 내년 發效

【근】 대한민국은 11일(목) 유엔 인권위원회에 '拷問방지협약' 가입을 신청했다. 이 협약은 1984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은 1988년 11월 11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했다. 이 협약은 1984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은 1988년 11월 11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했다.

다친뒤 11일만에 가오리를 유출한 뒤 유출이더라면 된다. 이 결정은 한국무의 기조가 '세계인민회의'에서 '국민방위지협약'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정은 한국무의 기조가 '세계인민회의'에서 '국민방위지협약'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 투시경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면한 검사들의 이름이 공개되자(한겨레신문) 28일치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과 반성의 여갈린 반응을 보였다.

반발의 이유도 다양했다. 대부분은 85년 당시 서슬퍼런 군부

정치 아래서 '공안'이 판을 치던 시대상황에 책임을 돌렸다.

어떤 고위관계자는 "당시 수사는 경찰이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문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다.

당시 김씨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검사는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러면 어떻게 문책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론재판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가만 있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이런 태도는 5·6공 치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많이 맡았던 '공안통' 검사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다. "군사정권 아래서의 공안사건을 들춰보면 안 걸릴 검사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잘못은 일단 덮어두고 앞으로 잘 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잘못을 시인

## 변명여지 없는 인권 무감각증

하고 반성하는 검사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반응들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또한 당시 떠맡고 싶지 않은 '골치 아픈 사건'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해야 했던 검찰 조직의 생리도 이해된다.

그러나 당시 김씨를 수사한 검사들은 김씨로부터 고문사실을 전해듣고도 약속이나 한 듯이 이를 의면했다.

인간다운 생활과 대접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한 개인이 밀폐된 남영동 분실에서 짐승에게도 저지르지 못할 끔찍한 고문을 당한 사실을 모른 채 의면하거나,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이 과연 '정의의 수호자'로 '법치'를 앞세우며 국가 공권력 행사의 최일선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정황 때문에 김근태씨 고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처신에 대해서 "인권 무감각증

에 걸린 소신 없는 꼭두각시"라는 모진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김씨의 부인 인재근씨는 "당시 검찰·경찰·안기부의 거대한 삼각 공조체제에 맞서 한 인간이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느낌이 었다"고 회고했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검찰 내부의 대대적 수술부터 하루빨리 해야 한다."

한 인권변호사의 이런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성봉 기자

# "유신 아래 스러져간 남편 원혼 달래주오"

1993. 9. 19

중정 고문 숨진 고교교사 아내.진상규명 탄원

비판적 지식인들에게 유달리 암흑했던 70년대 유신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 당한 끝에 그 후유증으로 숨진 한 고교 교사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는 외침이 16년 만에 그의 부인에 의해 제기됐다.

박정자(53·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주공아파트 112동 403호)씨는 15일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내 억울하게 용공 누명을 쓰고 숨져간 남편의 죽음에 대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씨에 따르면 유신 철권통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77년 6월 당시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상고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던 남편 김환진(당시 42살)씨가 어느날 중앙정보부 전주본실에 끌려가. 이를 만에 돌아온 뒤

시름시름 앓다가 1년 뒤인 78년 9월 숨졌다 는 것이다.

정보부에서 돌아온 김 교사는 혹독한 고문으로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는 등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으며 잔뜩 겁에 질린 채 "이런 사실을 발설하면 죽인다고 했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사흘 뒤 "용공교사이니까 사표를 내라"는 교육청의 종용을 받으면서부터는 더욱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고 박씨는 말했다.

박씨와 당시 김 교사의 동료교사들, 절친한 친구 이아무개(57·농업·김제군 금산면)씨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 교사는 수업시간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등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등 유신체제를 비판한 것이 빌미가 돼 밀고를 당했다. 김 교사는 당시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의 서명까지 들어 있는 투서를 정보부에서 보았으며, 정보부쪽은 혹독한 고문을 가하면서 자신을 용공분자로 조작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당시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의 서명까지 들어 있는 투서를 정보부에서 보았으며, 정보부쪽은 혹독한 고문을 가하면서 자신을 용공분자로 조작하려고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김 교사가 한을 품은 채 1년 남짓 투병생활을 하다가 숨지자 비교적 풍족했던 가정 이 일시에 풍비박산났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박씨였지만 후환이 두려워 그나마 입을 다물어야 했다. 시집은 물론 친정 식구와도 거의 접촉을 끊다시피 했다. 남편의 병구완으로 가산을 탕진해 박씨는 그뒤부터 15년 동안을 식당 종업원과 파출부 등 막노동을 해가며 다섯 남매의 생계를 이어왔지만 자신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한으로 남아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87년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냈으나 군사독재라는 같은 뿌리여서인지 묵살당했다"고 울먹이는 박씨는 "문민정부만큼은 이 사건 진상을 제대로 밝혀 남편의 억울함을 달래주고 누명을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주/장세환 기자







# '고문피해' 잇단 소송준비

1993. 9. 20

## 5·6공 피해자들 정신질환·자살등 후유증 심각 신원권 인정계기 손해배상 청구나서

### 인권단체선 피해접수 소송대행

김근태씨 고문 경관 법정구속과 박종철씨 가족 신원권 인정 등 최근 고문피해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이 나오면서 5·6공 군사정권 시절 수사기관에 의해 고문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인권단체에서는 수사기관의 인권유린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시국사범 뿐 아니라 일반사범까지 대상으로 하는 '고문피해자 고발센터'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대행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문국진(33·연세대 79학번)씨 부인 윤연옥(30)씨는 다음주 안에 국가를 상대로 고문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윤씨는 이미 의사 소견서와 증인진술 등 소송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변호를 맡을 백승헌 변호사와 법률검토까지 끝낸 상태이다. 윤씨는 지난 90년부터 문씨를 치료해온 서울 정신경정신과 '배아무개' 박사로부터 문씨의 정신질환이 '고문에 의한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라는 소견을 받아냈으며, 현재 문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고대부속 구로병원에서도 '고문에 의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증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았다.

윤씨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80년 경찰에 구속돼 심한 고문을 당한 뒤 86년 10월 시국사건으로 또 다시 연행돼 2개월 동안 청량리경찰서와 성동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 독방에서 온몸이 튜인 채 폭행을 당하는 등 고문을 당했다는 것

이다. 또 지난 90년 8월 정신분열증을 앓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건물에서 투신자살한 최동(성균관대 국문4 제적)씨의 가족들은 최씨가 이미 숨진 만큼 신원권 인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89년 4월 '인천·부천노동자회'사건으로 구속돼 정신병을 얻었던 최씨는 자살 당시 "구치소에서 가해진 음모로 폐인이나 다름없게 됐다"는 유서를 남겼으며, 최씨의 부모는 "경찰에 연행되기 전까지 멀쩡하던 아들이 고문 후유증으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해 연행됐다 풀려난 전희식(35·전 진보정당추진위 인천북강 위원장)씨도 "안기부에서 48시간 동안 심한 폭행을 당해 3주 진단이 나왔다"며 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고문피해자 고발센터'를 열어 시국사범과 일반사범 고문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고발자들을 중심으로 '고문피해자 모임'을 구성하는 한편 이들을 대신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행해줄기로 했다.

인권위 신승민(33) 간사는 "박종철·김근태씨 등 극히 소수의 사례를 빼고는 군사정권 시절 수사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고문과 가혹행위가 법정에서 심판받은 예가 거의 없다"며 "그동안 군사통치가 계속된 데다 피해자들이 막강한 수사기관과 맞서기에는 너무 나약한 개인에 지나지 않아 대응 움직임을 보이기 어려웠지만 민간정부에서는 이런 인권유린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발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일 월요일 발행















# "북한 고문·처형" 30년간 수천명

국제사면위  
19.10.15

【도쿄=로이터 AFP 연합】북한은 지난 30년간 수천명을 고문하거나 처형했으며 양심수 수만명 이상 구금해왔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14일 밝혔다.

위원회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북한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이러한 총체적 인권침해는 러시아 법무장에서 2만여명을 강제노역시키고 있는 것을 비롯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투옥 경험자와 민간 소식통, 지난 9년 평양을 방문한 사면위 조사원과 만난 북한 관련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사면위는 북한에서는 해마다 수천명이 불공정한 재판절차를 거친 뒤 처형되고 있으며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는 양심수 가운데는 재일 동포와 그들의 일본인 아내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경자들은 92년 11월 이런 종류의 처형이 행해졌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사면위는 이어 북한이 최근 들어 식량과 에너지 부족으로 고문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 경찰 안가 24곳 운영

위장간판 걸고 밀실수사등에 사용

한겨레 19.10.15

경찰이 보안·정보기관의 업무를 위해 운영 중인 위장사무실 등 안가가 모두 24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14일 유인태 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이 총 24곳에 운영 중인 위장사무실은 모두 94개에 이 가는데 24곳이 보안·정보 업무 행보 특화된 위장사무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안·정보 기관의 사무실은 대부분 '00상사' '00계보' 등의 위장 간판을 내걸고 정보수집과 밀실 수사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위장사무실은 본청이 서대문구 홍제동에 1천6백35평 규모의 보안5와 사무실 등 보안·정보기관 사무실 5곳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서울·대구·경기·충북·경북·경남 등 6개 경찰청이 각각 2

곳, 부산·인천·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경찰청이 각각 1곳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태 의원은 "이런 비공개 위장사무실은 과거 특재정권시대에 반독재력을 탄압하기 위해 은밀하게 운영해오던 것"이라며 "국민시대를 맞아 모든 행정업무의 공개와 추적을 받기 위해 경찰도 보안·정보 관련 위장사무실과 안가를 모두 없애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for Human Rights

"안기부서 고문·성추행" 수사관 전원 검찰구박

전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 김삼석(28)씨의 부인 윤미향(28)씨를 구로구 독산1동)씨는 20일 김씨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했다며 수사책임자와 담당수사관 전원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윤씨는 고발장에서 "남편 김씨가 안기부에 연행된 뒤 수사관들이 3~4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온몸을 구타했으며, 15일에는 한 수사관이 화장실에서 김씨에게 성적 모욕과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또 김씨의 여동생 은주(24)씨도 수사관들이 가혹행위와 성적 모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의 북한인권 보고서가 북한인권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수천명이 고문되거나 처형되었으며 양심수 수만명 이상 구금해왔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14일 밝혔다.

위원회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북한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이러한 총체적 인권침해는 러시아 법무장에서 2만여명을 강제노역시키고 있는 것을 비롯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투옥 경험자와 민간 소식통, 지난 9년 평양을 방문한 사면위 조사원과 만난 북한 관련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사면위는 북한에서는 해마다 수천명이 불공정한 재판절차를 거친 뒤 처형되고 있으며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는 양심수 가운데는 재일 동포와 그들의 일본인 아내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경자들은 92년 11월 이런 종류의 처형이 행해졌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사면위는 이어 북한이 최근 들어 식량과 에너지 부족으로 고문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Thought trans pmatton will bring about world trans pmatton."















## “고문 추방위해 제도 개선을”

1994. 4. 12. 피해자 사례보고회서 가족들 참혹한 증언

잠 안재우기, 고춧가루 탄 자장면 먹이기, 담뱃불로 지지기, 밧줄로 묶고 때리기 그리고 자살기도로 이어지는 정신이상증세, 수사기관의 밀실에서 자행되는 가혹한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례보고 및 고문방지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에서 법조계와 의료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한 뒤 정신병원을 떠돌며 후유증을 앓고 있는 문국진(34)씨 후원모임이 주최한 이날 모

임에서 참석자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육체를 파괴하는 고문은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남편과 동생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참혹한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토론장은 탄식과 울분이 뱀 한숨으로 가득 찼다.

86년 11월 거리시위중 경찰에 끌려가 쇠파이프 등으로 구타당한 뒤 영등포구치소에서도 고춧가루를 탄 자장면 먹이기 고문을 당한 강환웅(30·당시 중임대 1)씨의 누나 강희숙(33)씨는 “동생이 출소한 뒤 환청에 사로잡히는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며 울먹였다. 같은 해 4월 시위 도중 연행돼 구치소로 넘겨진 뒤 징벌방에 갇혀 집단구타를 당한 김복영(29·당시 연세대3)씨의 누나(33)는 “너희들은 항상 나의 뇌수에 칼집을 꽂고 나의 꿈은 항상 피비린내로 얼룩졌다”고 써놓은 북영씨의 일기장을 읽으며 흐느끼기도 했다.

이날 고문추방을 위한 법적 문제를 발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혜철 변호사는 “인간의 인내를 시험하는 고문을 추방하기 위해 자백의 증거능력부정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강문 기자

##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 발제1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 전혜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발제2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 양길승(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토론 : 오완호(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우섭(민주당 정책실장)
- 일시 : 1994년 4월 11일(월)
- 장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 (전철 교대역 하차, 전화:588-6944)
- 문의 : 796-8364, 5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 후원 : 민주당인권위원회 / KNCC인권위원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인권운동사랑방 / 연세대총학생회 / 전국대학민주운동회대표자협의회

※고문피해자 또는 후유증을 앓고 계신분은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96-8364)

( \*물T 반40)공물 반40(半)반 10'병장사 공물519' S

1994. 9. 04

## 5·6공 고문피해자 9명 공소시효에 문제제기

서울고검에 항고장  
5·6공 당시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83년 이근안씨 등에게 고문을 당한 함주명씨 등 9명은 지난 7월

7일 자신들이 고문 수사관들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검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3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은 시효제도가 없으며 ‘국제인권규약’ ‘전범과 비

인도적 범죄자에 대하여 국내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 등 국제법은 고문을 비롯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내에서도 해외도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근안씨가 김근태씨를 고문한 사건도 88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공범에 대한 재판을 벌인 기간의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등 공소시효제도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항고장을 대리접수한 민가협이 한 관계자는 “항고·재항고·헌법소원 등 모든 국내법적 절차를 밟은 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법정이라도 고문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현 기자

1994. 9. 23

## 고문방지협약 가입의결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22일 우리나라의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안을 의결했다.

이병호 기자







대법원 공소시효 적용 여부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일 또는 공소권 발생일 중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고소행위 종료일 또는 고소권 발생일 중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취지는 대법원 98년 12월 12일 37조 소의 결정에서 명확히 밝혀졌다. 이 결정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고소행위 종료일 또는 고소권 발생일 중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결정에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고소행위 종료일 또는 고소권 발생일 중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고소행위 종료일 또는 고소권 발생일 중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대법원 98년 12월 12일 37조 소의 결정에서 명확히 밝혀졌다. 이 결정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고소행위 종료일 또는 고소권 발생일 중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결정에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고소행위 종료일 또는 고소권 발생일 중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고소행위 종료일 또는 고소권 발생일 중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대법원 98년 12월 12일 37조 소의 결정에서 명확히 밝혀졌다. 이 결정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고소행위 종료일 또는 고소권 발생일 중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결정에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고소행위 종료일 또는 고소권 발생일 중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삼청교육 피해자들 전두환씨등 4명 재고소

95. 2. 10

삼청교육피해자동지회(대표 이택승)는 9일 지난 80년 삼청교육과 관련해 전두환·최규하 전 대통령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김만기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 등 4명을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대검에 재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기간인 7년5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 낸 것이어서 검찰의 삼청교육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살인 및 살인교사로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7년 동안 공소시효가 연장되며, 살인이 인정되지 않고 감금치사 등의 혐의만 인정될 경우에는 6월이 공소시효 만료시점이 된다. 지난 91년부터 삼청교육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모두 5건이었으나 검찰은 대부분 '감금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공소시효 7년이 지났으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인현 기자 침수언체대표등 두 여자

증인신문 자유진술로 바뀌

95. 2. 10

대법 내달부터 시범 실시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새로운 재판 진행방식을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했다"고 밝혔다. 김인현 기자 대법원은 9일 증인신문 방식을 지금까지의 '예, 아니오' 방식에서 자유 진술 방식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재판 심리방식을 시범 실시하는 재판부를 지정해 오는 3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되는 시범재판부는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수원지법 등 10개 법원의 민·형사 23개 재판부다. 대법원은 또 "시범실시부로 지정되지 않은 재판부도 새로 접수

대안형 소지

대안형 소지는 범죄행위 종료일 또는 공소권 발생일 중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고소행위 종료일 또는 고소권 발생일 중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결정에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고소행위 종료일 또는 고소권 발생일 중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병역사 운동단인

SARANGBANG Center for Human Rights

## 유괴살해 공방 오늘 결론난다

95  
2.24  
(2397)

공범 조작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날카로운 법정공방을 벌여온 부산 만덕국고생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의 선고공판이 24일 오후 1시30분 부산고법 0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는 23일 검찰이 "남아무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증언한 남자 친구 김아무개군이 애초의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날 두번째로 낸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공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10일 일어난 이 사건의 공판은 11월21일부터 시작돼 지난 6일 변론이 재개되는 과정을 거쳐 13차례 지난 20일 사실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원종성(23)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남아무개(19·여), 옥영민(27)씨와 숨진 강양의 이종사촌언니인 이아무개(19)양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부산/이수윤 기자

"사상 불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Thought transformation will bring about world transformation.)

# 군검찰 가혹수사 말성

## 하극상 신문·사병 몽둥이질 고소·진정 잇따라

군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상·하급자를 가리지 않고 폭행해 고소·진정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예비역 육군대령인 김아무개(육사 26기)씨는 작년말 국방부에 하극상과 관련한 고소장을 내어 검찰관인 공군 김도영·해군 이주원 대위를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현역 대령으로 국방부 인사기획과장을 맡고 있던 지난 93년 5월24일 국방부 검찰관인 공군 김 중위(당시 계급)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해군 이주원 중위(당시 계급)가 민간인 이아무개씨가 고소한 사기사건을 발췌조사하면서 얼굴

등을 30여대 때리고 가슴을 10여차례 구타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당시 가혹행위가 문제되자 국방부는 이 중위에 대해 해군으로 원대복귀시키는 인사 조치에 그쳤으며, 김 중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전역한 김씨는 이와 관련해 "군 수뇌부가 사건의 확산을 두려워 해 단안을 내리지 않아 고소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수사진전이 없다"며 "김 중위가 전법부장관의 사위란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관 강영석 중위는 또 지난 10월초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항공기 기름유출 수사를 하면서 함·원아무개 병장 등 사병 2명을 연행해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사실대로 말하라"며 마구 때렸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검찰관들이 조사를 하면서 사병 5명을 몽둥이로 다리 부분을 마구 때린 사건이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이런 사건처리는 구타사건이 일어나면 구타자를 형사처벌하고 지휘관을 문책하는 관례와 크게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조사 결과 검찰관들이 다소 거칠게 신문한 사실은 있지만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으며, 축소진술을 강요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김성걸 기자



# “拷問자백” 불인정” 82년



日帝 형사법정 일제시대의 한 형사법정. 순사(범대 아래 왼쪽에서 두번째)가 칼을 손에 쥔 채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다.

가정에... 고문기  
에 刑具까지 갖추 놓고 피  
의자를 신문했다. 고문기  
구와 다를 바 없는 형구가  
당시 조선 합법적인 수사장  
비였던 셈이다.  
甲午개항후 刑具제한  
그러다가 갑오개혁 이후

## 尹노파·朴尙恩양 사건등 잇단 드 최그엔 「미란다수칙」 배포 人權 신

### “울던 아이도 울음 그쳤다” 日帝순사 공포의 대상

울던 아이도 『순사(巡査) 온다』  
는 말만 들으면 울음을 그쳤을 정  
도로 일제 순사는 공포의 대상이  
었다.

실제로 당시 순사들은 경찰사법  
권제도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순사가 수사도 하고 직접 즉결심  
판까지 맡았다(요즘도 즉결심판제  
도는 있지만 이는 경찰의 신참에  
대해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으로  
일제때의 그쳤과는 근본적으로 다  
르다).

물론 일제때도 즉결심판의 대상  
은 「경미한 사건」에 국한됐다. 백  
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백  
圓 이하의 벌금 과료에 해당되는  
도박 폭행 행정법규위반사건 등이  
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형  
사사건이 즉결로 해결됐다고 「법원

#### 사법권 부여 막강한권 행사 卽審도 말아 조선인에만 拷刑

사」는 기록하고 있다.  
당시 순사는 태형도 내릴 수 있  
었다. 1912년 3월18일 공포된 조선  
태형령은 △3개월 이하의 징역 구  
류에 처할 사람 △1백圓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할 사람중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돈이 없다고 인정되  
는 사람 △5일내에 벌금 과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태형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형은 조선인에게만 시행됐다.  
시행 장소는 감옥이나 즉결관서등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  
다.

조선 태형령은 3·1운동 다음해  
인 1920년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  
치」를 표방하면서 폐지됐다. 그러  
나 경찰사법권제도는 일제말까지  
계속됐다.

관적 심  
진술의 이  
없어 증  
다고 밝  
2, 3심  
지원은  
결론 내  
이후에도  
사법개  
동안 고  
과감히  
조를 다  
이뤄져야  
나왔다.  
숙명의  
구속은  
구속이  
교수) 주  
레스턴  
사법제도